

# “변시 법전 밀줄긋기는 부정행위”

지난 5~9일 제10회 변시, 법전 밀줄긋기 허용

“컨닝페이퍼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

연대 로스쿨 강의로 유사문제 제출 등 논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변시)에서 법전에 줄긋기와 관련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과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 규탄 성명을 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28일 공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시험 관리 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시험 관리, 감독상의 과오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중용했다”며 “시험 시작 전 수험서의 내용을 법전에 그대로 옮겨 밀줄 긋는 등의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컨닝페이퍼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모든 변시에서 법전에 일체의 표시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마다 법전을 회수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그런데 이런 취지에 반해 ‘법전’을 회수하지 않으니 밀줄을 그어도 된

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주객이 전도된 허위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밀줄을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유례없이 법전 밀줄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시험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했다”며 “앞서 9번의 변시에선 법전에 어떠한 표시를 남기지 않거나 한 원적이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인걸 알면서도 이런 행태를 보인 법무부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감독관들에게 법전에 밀줄 긋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그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말라고 공지했다”며 “응시생들에게 사전에 명시된 준수사항과는 달리 법전 밀줄이 처음부터 허용됐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자 응시생을 면피의 도구로 삼은 법무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부정당했다”며 “국가기관이 문자 한 통에 의해 법치



방효경(왼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동하고 있다.

에 대한 신념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놓인 우리의 무력함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시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특정 고사실에서 감독관이 시험 도중 법전 밀줄을 허용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험 사를 짜인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밀줄을 그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험이 있기 전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했으나,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밀

줄긋기를 허용하자 공지사항을 시험 도중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 외 이화여대 4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생 타이머 알람이 울리자 고사장 현장 책임관이 이를 시험종료 종으로 착각해 선택형 시험을 1분 조기 종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지난 18일 법무부에 제10회 변시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유나기자

## 목포해경, '중국산 담배 21억원 상당' 밀수어선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시가 21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70박스를 밀수하려 한 신안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21분께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한 해경은 밀수 의심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 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A호가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도주를 시작하자 1시간30여 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잡아 갑판과 여창 등에서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가 은닉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담배는 공해상에서 불상의 화물선과 접선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육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체 내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담배 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절도사건 무마' 뇌물 챙긴 경찰관 징역2년 구형

경찰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전남 수포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경찰은 A경위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간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노래방 업주 B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기업 직원으로 검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코인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 금은방서 금목걸이 훔친 10대 2명...목에 걸고 가격 묻고

슈퍼마켓 주인을 흥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B(80대 여성)씨를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대전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빌라 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진 친모 검찰 송치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 서구 한 빌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건물 바닥에서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숨져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척추와 두개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 광주시,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특정감사...‘사고예방 및 활성화’

다음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749개소 합동점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장 이용 활

성화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월 1일부터 3월12일까지 749개소를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위주로 합동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에는 현재 749개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중이며, 구별로는 동구 129개, 서구 254개, 남구 74개, 북구 155개, 광산구 137개 등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이행 여부 ▲무단방치와 철거 행위 ▲정기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 배치와 교육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

도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서구 상무지구 A빌딩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2018년 11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2년2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기피로 인한 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